

김진일 경기도의원 재선 도전

공동주택 삶의 질 개선 하남시 최초 후보 등록

김진일(하남1·사진) 도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하고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남시 현직 지방의원 최초로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역시! 진짜일꾼. 하년 일 더 확실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지하철하남선의 안전한 개통, 경기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위례도서

관건립, 국토종주자전거길 안전시설 설치 등 하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확보에 주력했다"며 "재선이 되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시대에 맞춰 공동주택 삶의 질 개선과 관리비 절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젊고 유능한 진짜일꾼이 하남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계속 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공동주택 전문가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출마선

언을 자제하고 보도자료로 대신하고 중심으로 진일보 할 것을 다짐하며, 피켓을 매고 하남시 둘레 60여 km를 한 바퀴 걷는 것으로 출마선언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그린뉴딜TF 위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민창 기자

열악한 도서지역 교육환경 개선

윤재상 인천시의회 의원 공동관사 신축 해결 등 촉구

윤재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 열악한 도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18일 열린 '제278회 인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화군 교직원들이 사용하게 될 공동관사 신축과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강화군으로 발령받은 교직원들이 사용하게 될 신축 교직원 관사는 입주 희망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

다"며 "세대를 늘려 입주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2011년 개원한 마니산유치원에 아직까지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교실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여러 이유를 들며 주차장 설치를 미뤄오고 있다"면서 "인근 조산초등학교의 노후된 급식실을 신축·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마니산유치원 주차장으로 활용해 어린 아이들의 통학안전 문제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안종상 기자



윤재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 열악한 도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 필요

진용복·남종섭 도의원 특수교육지도사 간담회

"특수교육 정책이 땀집식 미봉책이 아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용복(민주당, 용인3)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남종섭(민주당, 용인4) 교육행정위원장은 16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이정희 특수교육지원담당 사무관, 용인교육지원청 정혜정 초등교육지원과장, 박여진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적응 어려움 및 교육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선희 경기도교육

청 특수교육과장은 "도내 2268개 학교에 4146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는 1144명에 불과해 모든 특수학급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정된 정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증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불편함을 모두 헤아릴 수 없는 환경이기에 주무 과장으로서도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특수교육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생각"이라고 전하고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유지하려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도 이해는 하지만, 필요한 직종은 늘려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16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이정희 특수교육지원담당 사무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적응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진 부의장은 이어 "땀집식 미봉책이 아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당연히 학생이므로, 학교는 당연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교육지도사의 빈자리를 인식해 이중 삼중의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창 기자

대통령 당선, 공약은 지금부터

노동·경제 공약... "규제 걸쇠 풀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돌입했고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화 시키는 업무에 돌입했다. 이에 윤 당선인의 노동과 에너지 등의 공약 중 특히 그가 강조한 공약을 짚어 본다.

윤석열 당선인 노동·경제 공약 주52시간 근무제 탄력적 개편 탈원전 폐기... 신한울 재개도 주식양도세 폐지, 투자자 보호

◇노동... 주52시간 근무제 탄력적 개편
윤석열 당선인은 인공지능, 공공·민간의 고용 노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일자리 매칭·중소기업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윤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스템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주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개편해 스타트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특별업종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 노동이사제 즉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

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법안은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당선인도 대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우선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통제하고 일반 기업은 개별로 교섭하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상 노동이사제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민간 기업으로 확대와 함께 이미 존재하는 노조 대표·노사협의회 대표와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국정을 자율적 민간 중심 경제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해 왔기에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강제 입법이 아닌 경영진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맡길 전망이다. 최저임금에 관련된 공약은 지급 여건고려해 지역·업종별로 차이를 뒤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낮은 임금을 책정할 지역

과 업종은 인력 공급 문제와 함께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형사 기소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해 현행보다 강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개선으로 이를 돌파할 계획이다. ◇에너지·탈탄소... 탈원전 폐기 신한울 재개
윤 당선인은 친환경 보급과 탈탄소를 위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해 국가 온실가스목표 4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을 키워 한·미 간 협력을 도모해 원전 수출지원단을 운영해 기술력 수출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그리고 ESG 평가 지표를 표준화 시켜 기업의 현황을 평가하고 금융 및 세계 지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또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탈탄소 정책이 동참시킬 예정이다. 이외에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석탄 등 화석연료의 에너지 발전 비중을 40% 대로 감축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2035년 금지 공약도 발표했다.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경제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조세와 금융 지원의 확대, R&D와 신기술제품 시장진입 활성화 등을 제도 개선과 규제 철폐로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고 최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드론 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을 특별법 제정으로 활성화시켜 수도권에 실증 노선 상용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과학과 디지털 국가 전환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 R&D 총괄 컨트롤타워로 진두지휘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인 국가 연구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

의회 단신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토론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박옥분(민주당, 수원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옥분 의원의 진행으로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이진우 의사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부천북고등학교 권성규 교장, 전교조 경기지부 허원희 영양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이희원 영양사분과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고지은 노동안전위원장, 수원수성고등학교 김미월 학교운영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임종택 사무관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진우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의사는 높은 재해를 중 전국 대비 경기도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17일 부천북고등학교 권성규 교장, 전교조 경기지부 허원희 영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사진=경기도의회)

가 가장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산재 실태 중 사망 사례, 집단 직업병 발생 사례와 학교 급식 종사자가 호소하는 건강상 문제, 급식실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을 살펴봄에 다양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김미월 수원수성고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과 이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관심이 많다"고 전하고, "학교 알리미 사이트의 공식자료를 인용해 수원시 초·중·고 급식 실시 현황과 급식 담당 평균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창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 예방 유튜브 출연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민선8기 수원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수원특례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수원시민들의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조 의장은 최근 인기 중고차 판매 유튜브 '차나두'의 이시안 대표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미끼상품)을 올린 중고차 딜러와 직접 통화하는 장면과 허위매물 만나 현장을 포착하는 2편의 영상을 촬영,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수원지역 중고차 시장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허위매물(허위딜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의의 딜러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 의장이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실제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구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중고차매매단지는 전국에서 가장 큰 단지 중 한 곳이다. 최근 들어서

는 수원지역 중고차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수원에서 이 같은 허위매물 영업을 펼치고 있어 수원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의 이미지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먼저 지난 16일 공개된 1편 '수원시의장님과 허위딜러를 잡아봤습니다'에는 조 의장이 직접 허위딜러와 통화를 하며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성행 행위를 고스란히 담았다. 영상속에 등장하는 허위매물 업체는 '행사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시세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아닌 전차 시승으로 탄 용도 이력 이 있는 차량이며, 이는 100% 허위매물이라는 게 차나두의 설명이다. 현재 이 영상의 조회수는 2만6000회를 넘겼다. 19일 공개한 2편에는 조 의장이 직접 허위딜러들을 만나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이 성행하는 구조와 허위딜러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차나두'와 '청년 조석환TV'에서 볼 수 있다. 김희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로 금강강변역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속했고 이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겠지만 과학계의 환영을 받은 공약이기도 하다.

◇주식 양도세 폐지

윤 당선인이 주식양도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을 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중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선 1차 TV 법정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벌 3·4세의 번칙 판법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짚었으나 개인 투자자 보호가 취지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이기에 조기 추진할 가망성이 높다. 홍정윤 기자